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코로나 속에 맞는 추석

오는 10월 1일(목), 국군의 날이 한가위 추석 명절이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바로 자신과 가족, 이웃과 국가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군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국가 조직이다.

교육에서 입학이나 시험 등에서 부정이나 불공정이 있으면 안 되듯이, 국방의 의무 이행과정에서도 특혜나 비리가 있으면 국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한다.

최근 추미에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와 휴가 등에 있어서의 특혜와 위법 의혹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이유도 병역과 교육은 삶과 신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리고 가을은 거두어들이는 결실의 계절이다. 오곡이 익어가는 황금 들판이 연상되는 10월에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과 술로 조상에게 성묘하고 차례를 지내는 추석은 참으로 좋은 명절이다.

맑은 하늘 앞산 위에 휘영청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은 동네 아이들도 방안에만 있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

서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전하여 오고 있다.

설날이나 추석에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친지들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이나 제일 손 위 형제집에 모여서 떡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간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격려와 정을 주고 받는 시간이 다. 그런데 올해는 봄에 시작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일상이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낯선 틀에 갇혀서 좀 어정쩡하게 되어 버렸다.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추석에 고향에 가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오천만 인구에서 몇 천 만명의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우려는 타당하다. 국민들은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협력해서 코로나 국난(國難)을 하루 빨리 종식(終息)시키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코로나 국난 앞에서 보수와 진보, 여(興)와 야(野), 세대와 지역은 없다. 모두 협력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의

지침을 잘 따라주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엄중한 시국에 일부 교회의 현장 예배와 일부 강경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국민들의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다시 일부 단체가 10·3 개천절 집회를 광화문과 종로에서 개최하려고 집회신고를 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강제 해산을 시킬 예정이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선을 긋고 말리고 있다.

표현의 자유이든, 집회결사의 자유이든 헌법상의 어떠한 자유권과 기본권이라도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는 없다. 공동체, 즉 공공의 이익과 질서,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이라는 큰 이익과 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또한 당연히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제약도 받는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 안보 침해라는 중대한 이익을 짓밟고 북한으로 빼라를 마구 날리던거

나, 남을 공연히 비방 모욕을 가할 자유가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

지금 마스크로 눈과 이마만 내놓고 얼굴을 가리는 복면(覆面)을 하고 다니고, 어디를 가나 1m 이상 떨어져서 있어야 한다. 손도 자주 씻고 기침만 해도 주위를 둘러보면서 눈치를 보아야 한다.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 있는 것이 상책이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약속이나 모임은 거의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답답하고 불안한 일상 속에서 맞는 이번 추석 명절은 참 특별하다. 자신들을 염려해서 올 추석에는 고향에 오지 말라는 현수막을 마을 입구에 걸어 놓고 있는 곳도 뉴스에 나오고 있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정반대로 '몽치면 죽고 흠어지면 산다'가 되어서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9월 19일 10시 기준,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3,038.5만명, 사망자 95.6만명, 선진국 미국 확진자 692.6만명, 사망자 20.8만명, 인도 확진자 530만명, 사망자 8.5만명, 브라질 449만명, 13.5만명에 비하면 한국은 확진자 22,893명, 사망자 378명이다. 5일 간의 추석 연휴 기간에 자율적인 여행 자제를 실천하여 코로나 방역과 종식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국민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사설

'광주·전남 행정통합' 진지한 논의 필요

이용섭 광주시장이 던진 '광주·전남 통합론' 화두로 지역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초대형 이슈로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에 앞서 "광주·전남은 천년공동체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 공멸 뿐"이라며 공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던진 해결책이 행정통합. 그는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이기에 통합은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사도, 부지사도, 실·국장도 아닌 준국장급인 대변인 명의로 짧은 임장문을 통해 "원칙론엔 찬성한다"면서도 "공감대와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절차상 문제를 삼아 법조계의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인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 즉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도시 위상과 관할 확대에 따른 주민자치 저하, 인사·재정권 재조정에 따른 할거루기, 도농 불균형, 여기에 세수 감소와 기초의회 소멸에 따른 풀뿌리 약화, 공직사회 반발, 소모적 논쟁 시 예상되는 비난 여론 등도

걸림돌이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론과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세계적 추세인 지자체 조광역화와 메가시티 건설, 소지역주의 탈피와 시·도갈등 종식의 확실한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어서 다.

광주 146만, 전남 186만으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낼 수 없고, 243만 대구와 266만 경북의 통합, 부산(341만)과 울산(114만), 경남(336만)을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 통합 논의, 프랑스 '레지옹(광역자치체) 통합 개편과 일본의 행정 개편 등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고 본 이 시장의 판단에 공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330만 통합인구를 등에 업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입김이 세질 수 있고,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행·재정적 남비와 중복투자는 줄일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4차 산업혁명시대 경제구조 개편이 시급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요구도 나오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혁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 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버스노선, 교육행정구역 조정 등을 놓고 건건이 평행선을 달려온 시·도가 이제라도 '한 지붕' 아래 모여 상생의 '교집합 행정'을 펴 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통합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신고 18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여성 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석연휴 음식물 취급시 화재주의

추석연휴기간은 유동인구가 많고 들뜬분위기에 편승하여 안전불감증이나 부주의 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발생 우려가 높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15년~'19년) 추석연휴기간 전국에서 1,440건(평균 288건)의 화재로 사상자 79명(사망 8, 부상 71)과 재산피해 128억원이 발생하였다.

명절기간 주 생활시설인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가 34.6%로 평상시 27.0% 대비 7.6% 증가하였고, 화재 원인 또한 음식물 조리 등에 의한 화재가 20.2%로 평상시 13.5% 대비 6.7% 증가된 부주의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명절연휴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주거시설에서 보

내는 시간이 많고, 이에 따라 추석 음식 등을 준비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할 때나 불씨, 불꽃 등 화원 방지, 담배꽂초 취급 등에 대한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주택에서 각종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식용유를 사용하다가 불이 붙으면 당황하지 말고, 가스를 차단한 후 온도를 낮추고 튀김용기보다 큰 뚜껑을 사용하여 용기를 덮으면 불

은 꺼진다. 주변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해 진화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 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고, 화기취급시설 점검·정비 및 화재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환경 조성과 화재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

여수소방서장 김창수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포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